

##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

- 기본방향, 주요내용, 추진체계 및 일정 -

2016. 2. 25.

금 융 위 원 회

### 목 차

I. 추진방향 .....	1
II. 주요내용 .....	3
III. 추진체계 및 일정 .....	9
[별첨1] 주요과제 연간 추진일정 .....	11
[별첨2] 금융개혁 법안 입법현황과 계획 .....	12
[별첨3] 2015년 금융개혁 평가 및 서베이 결과 .....	13

## I. 추진방향

### 기본방향

- '15년 「제1단계 금융개혁」은 당국의 변화, 규제개혁,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도입 등 경쟁과 혁신의 「기반과 틀」을 마련
  -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규제·제도·관행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검사제재개혁, 그림자규제 근절, 금융규제개혁 등 추진
  - 금융회사도 변화와 혁신 노력을 스스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기술금융, 핀테크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
- ➡ 제1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변화와 성과의 조짐을 보였으나 「미완의 개혁」→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개혁을 완성
- 「제2단계 금융개혁」은 ①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확고히 안착시키고, ②미루었거나 부족한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
  - ① '15년에 추진한 과제들(70개 세부과제)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
  - ②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권에 끊임없는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이러한 성과를 금융회사·금융인프라의 해외진출로 연결
  - ③ 기업에게 보다 직접적·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장·공모제도 개편, 거래소 시장간 차별화 등 추진
  - ④ 이해관계 조정 및 협업이 필요한 과제 추진 (거친개혁)

\* 성과중심 문화, 금융회사 지배구조, 스튜어드십코드, 금융세제 개선 등

### 접근방식

- ① 일관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형성
  - 발표된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을 꾸준히 지속
    - ※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위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,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안은 7월 일괄 제출 예정
  - 금융개혁 70개 세부과제가 제도화되고 금융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
- ② 실천가능한 과제의 발굴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
  - 「현장점검반」을 통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외계층, 지방거주자, 주부 등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과제 발굴
  - 민간 중심의 「옴부즈만」을 본격 가동(2월)하여 비공식 금융행정규제 및 민원·소비자보호 제도 점검·개선권고
- ③ 도입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 제고
  - '15년 도입된 계좌이동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·개선
    - \* 예) 계좌이동서비스→계좌통합관리서비스, 비대면 실명확인 → 제2금융권 확대
  - 기업투자정보마당, 파이낸스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금융, 클라우드펀딩 등 기업자금 조달 서비스를 고도화
  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, 온라인 자문업 등 새롭게 도입하는 서비스의 품질도 지속 제고

## II. 주요 세부과제

4대 전략	12대 핵심과제	36개 세부과제(안)
I. 실물 지원 기능 강화	① 기술금융 확대·정책	① 투자기반 기술금융 확대 ② 기술신용대출 정책 ③ 맞춤형 컨설팅 강화
	②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	④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⑤ 상장·공모제도 등 전면 개편 ⑥ M&A 등 회수시장 활성화
	③ 정책금융 역할 강화	⑦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편 ⑧ 문화융성 지원 확대 ⑨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화 해소
II. 국민금융 편의 확산	④ 새로운 금융 서비스 확대	⑩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⑪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⑫ 온라인 기반 서비스 확대
	⑤ 국민재산 증식	⑬ 금융자문업 활성화 ⑭ ISA·내집연금 등 새로운 상품 도입 ⑮ 연금제도·금융세제 개선
	⑥ 서민금융 지원 확대	⑯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⑰ 채무조정제도 개편 ⑱ 서민금융지원 강화
	⑦ 소비자 보호 강화	⑲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⑳ 5대금융악 척결 등 금융사고 방지 ㉑ 금융소비자 역량 및 권익제고
III. 금융 산업 경쟁 제고	⑧ 핀테크 활성화	㉒ 핀테크 생태계 강화 ㉓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㉔ 빅데이터 활성화
	⑨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	㉕ 보험규제 전면 개편 ㉖ 글로벌 IB출현 기반 마련 ㉗ 금융회사·인프라 해외진출 지원
	⑩ 금융규제개혁	㉘ 그림자규제 근절 ㉙ 업권간 칸막이 규제 개선 ㉚ 미래금융 대비 규제를 전환 추진
IV. 자율 책임 문화 정착	⑪ 감독당국 변화	㉛ 감사제재개혁 착근 ㉜ 감독·검사 방식 선진화 지속 ㉝ 지역 금융소비자 등으로 현장점검 강화
	⑫ 금융회사 변화	㉞ 성과중심문화 확산 유도 ㉟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
접근 방식	신규과제 지속발굴	기존과제 점검·보완 현장 중심 체감도 제고

## 1 실물지원기능 강화

### ① (기술금융 확대·정책)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에서 투자로 확대

- (기술금융 기반 투자 확대) 약 7,500억원의 투자펀드를 운영,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(TECH)에 '기술기반 투자' 항목 신설
- (기술신용대출 정책) 은행이 직접 기술평가 역량을 확보하여 연간 20조원 규모의 안정적인 기술신용대출 공급
- (컨설팅 강화) 창조경제혁신센터내 파이낸스 존과 연계,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컨설팅 지원

### ② (자본시장 기업금융 강화)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

- (클라우드펀딩 활성화) 클라우드펀딩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우수 기업과 클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 '기업투자정보마당' 운영  
\* 총 8개 기업이 펀딩 성공(8.3억원), 22개 기업이 펀딩을 진행중(5.7억원)
- (상장·공모제도 개편) 상장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수인의 자율성과 위험선별기능을 강화하여 자금조달 여건 개선
- (회수시장 활성화)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, M&A 중개망 구축 등을 통해 '투자-회수-재투자'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 정착

### ③ (정책금융 역할 강화) 창조경제·문화융성 분야 지원 확대

- (맞춤형 정책금융 지원) 기업성장 단계에 따라 산은·기은의 지원을 강화하고 신·기보를 통한 맞춤형 보증제도 도입
- (문화융성 지원확대) 문화콘텐츠 금융센터 설립, 문화창조벤처 단지내 파이낸스 존 설치 등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 지원
- (인식·관행 개선)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없이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인식과 관행 개선

## 2 국민 금융편의 확산

④ (새로운 서비스 출시) 인터넷전문은행 출범,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도입 등 혁신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

⑩ (인터넷전문은행 출범) 3/4분기중 인터넷전문은행을 본인가, 4/4분기~내년초 인터넷전문은행 영업개시 예상

\* '15.11.29일, 한국카카오뱅크·케이뱅크 은행 2곳에 예비인가

⑪ (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) 계좌이동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, 본인명의로 계좌를 조회·이전·해지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

⑫ (온라인 기반 서비스 확대) 온라인·모바일 실명확인 확대<sup>1)</sup>, 보험다모아 개선<sup>2)</sup>,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<sup>3)</sup> 등 추진

\* 1) 은행권 외의 제2금융권에서도 시간·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금융서비스제공

2) 실제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보험료 비교기능 정교화 등

3) 보험금 청구방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

⑤ (국민재산의 안정적 운용) 자문업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ISA 등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는 한편, 연금시장을 활성화

⑬ (자문업 활성화) 독립투자자문업(IFA)<sup>\*</sup> 육성, 로보어드바이저<sup>\*\*</sup> 등 온라인 자문업 도입 등 금융상품 자문서비스 확대

\* 제조·판매업자와 절연되어 중립된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자문을 제공

\*\*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한정된 자문업 인력요건을 유효성·적합성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(로보어드바이저)까지 확대

⑭ (새로운 상품도입)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, 전세금 투자폴 운용<sup>\*</sup>, 내집연금 3중세트 등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

\* 임차인이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, 운용수익의 주기적 배당을 통해 월세 납부재원으로 활용 지원

⑮ (연금·금융세제 개선) 퇴직·개인연금계좌 간 계좌이동 허용, 연금포털 연계대상 확대 및 '개인연금활성화법' 제정 추진

⑥ (서민금융지원 확대)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,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

⑯ (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) 보증보험 연계 상품을 1조원 규모 공급, 신용평가 인프라를 확충하여 금융권의 여신심사 역량 강화

⑰ (채무조정제도 개편) 개별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서민·취약계층의 재기 지원

\* 신복위 법제화, 금융회사 등의 개인워크아웃 절차 참여를 의무화, 채무조정 절차·방법·효력 등 법제화,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등

⑱ (서민금융지원 강화)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인 '서민금융진흥원' 출범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한 '통합지원센터'<sup>\*</sup> 확대

\* 통합지원센터 : 현재 4개 → 32개, 상담·지원센터 : 현재 54개 → 약 100개

⑦ (소비자보호 강화)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하고 전산보안 등을 강화하여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

⑲ (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) 금융상품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가입절차도 개선<sup>\*</sup>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지속

\* 금융상품 가입/해지시, 기업의 금융거래과정 등에서 불필요한 서류·절차 검토

⑳ (금융사고 방지)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, 보험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,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등 5대 금융악 척결

- 전자금융거래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

㉑ (금융소비자 역량강화 및 권익제고) 금융교육 확대, 판매수수료 등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 능력 향상을 지원

- 불완전판매 예방, 금융회사 책임성 제고, 민원 관련 사후적 권익 강화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

### 3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

- ⑧ **(핀테크 활성화)** 핀테크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성공사례를 발굴·확산하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
- ②② **(핀테크 생태계 강화)** 핀테크 인포 허브(Information Hub)를 구축하고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 개편
- ②③ **(해외진출 지원)**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등을 통해 우수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구축
- ②④ **(빅데이터 활성화)**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사항들을 해소하고 한국신용정보원('16.1.1 출범) 등 인프라 활용 강화
- ⑨ **(새로운 성장동력 발굴)** 금융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험규제 개편, 글로벌IB 출현기반 마련,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
- ②⑤ **(보험규제 전면 개편)** 보험상품개발·가격 자율화 등 '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'('15.10월)을 차질없이 추진
- ②⑥ **(글로벌 IB출현 기반 마련)**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사모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기업금융 제공 여건 조성
- ②⑦ **(금융회사·인프라 해외진출 지원)** 금융회사·인프라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확대·보완하고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인프라 정비
- ⑩ **(금융규제개혁)** 그림자규제 근절, 칸막이규제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, 미래전망에 기초한 규제개편 전략 마련
- ②⑧ **(그림자규제 근절)** 금융위 읍부즈만 운영을 운영하여 비공식행정 규제를 개선하고, '금융규제 운영규정'('16.1.4)의 이행실태 점검
- ②⑨ **(칸막이 규제 개선)** 금융상품 판매·자문업의 겸영 확대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업무영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
- ③⑩ **(미래금융 변화에 대응한 규제 틀 전환)** 미래전망에 기초한 규제개편 전략을 마련하고 '금융규제 프리존' 도입 검토 추진

### 4 자율책임문화 정착

- ⑪ **(감독당국 변화)** '심판'으로서의 금융당국 역할을 확고히 정착하고 금융현장·수요자의 애로해소 노력도 지속
- ③① **(검사·제재개혁 착근)** 과징금·과태료 제도를 개선하고 공동 검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관행과 제도를 단계적 개선
- ③② **(감독·검사방식 선진화 지속)**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감독방식을 지속 정비하고 검사품질 관리도 강화
- ③③ **(현장점검 강화)** 지역 금융소비자 등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한번 방문한 곳을 재방문하여 개혁과제 안착여부 점검
- ⑫ **(금융회사 변화)** 금융권 스스로의 변화·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
- ③④ **(성과중심 문화 확산 유도)** 보수뿐만 아니라 평가, 교육, 인사, 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쳐 성과중심의 문화를 도입
- 금융공공기관이 선도하여 모범사례(Best Practice)를 제시하는 등 일반 은행 등 민간 금융권으로의 자발적인 확산 계기 마련
- ③⑤ **(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)** 지배구조법 시행('16.8.1일)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
- ③⑥ **(내부통제제도 강화)** 금융회사 감사,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조직의 권한, 인력의 적정성 등을 점검 및 개선
- 금융회사 임직원의 엄격한 직업윤리와 책임의식 고취 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확산

### Ⅲ. 추진체계 및 일정



① (금융개혁 추진위원회) 민간 중심의 심의·자문 기구로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설치하여 매월 개최

- (구성) 금발심 위원 10명, 금융위원장 및 금감원장 참여
- (역할) 새로운 개혁과제 발굴·심의하는 한편, 2015년 70개 금융 개혁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·개선하는 역할 수행

② (현장점검 체제) 현장지원단이 Bottom-up 현장점검체제를 총괄, 민간 중심의 옴부즈만은 비공식 금융행정규제·민원 개선역할 수행

① (현장지원단) 금융위·금감원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내실화하고 금융현장의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접수·처리

\* 금융소외계층 현장점검, 지역밀착형 금융발전전략, 금융개혁과제 점검에 집중

② (옴부즈만) 민간 중심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·시정 권의 기구

- (구성) 7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
- (역할) 비공식 금융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 불편해소 및 금융민원·소비자보호제도 개선 권고 등

➡ '16.2.26일 옴부즈만 출범, 「금융위 옴부즈만 운영규칙」 마련(3월)

### < 1~4월중 주요 금융개혁과제 추진일정(안) >

구분	과제내용
1~2월 < 既 조치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금융주소 일괄변경서비스 개시)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(1.18)</li> <li>· (기업투자정보마당 구축) 3만개 유망 투자기업정보 등재(1.20)</li> <li>· (클라우드펀딩 시행)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펀딩(1.25)</li> <li>· (증금리대출 활성화) 보증연계상품,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(1.27)</li> <li>· (채무조정제도 개편)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등(1.28)</li> <li>· (외국인투자등록제도 개선) 외국인 통합계좌(omnibus account) 도입(1.29)</li> <li>· (성과중심문화 확산) 금융공공기관이 보수·인사·교육 등 선도(2.1)</li> <li>· (ISA 활성화 방안) 은행에 ISA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 허용(2.15)</li> <li>· (비대면 실명확인 확대) 은행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(2.18)</li> <li>· (TECH평가 개선) 적극적인 기술금융 투자확대 유도(2.24)</li> <li>· (계좌이동서비스 확대) 은행창구, 인터넷뱅킹으로 확대(2.26)</li> </ul>
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옴부즈만) 옴부즈만 운영 규칙 마련</li> <li>· (중기특화IB 선정) 운영지침 제정, 신청공고, 평가 거쳐 선정</li> <li>· (ISA 시행) 일임계좌까지 확대하여 가입자 선택권 확대</li> <li>· (자문업 활성화) 자문업 범위확대, IFA 도입 방안 마련 등</li> <li>· (공모펀드 활성화) 성과보수 활성화, 펀드판매채널 확대 방안 마련</li> <li>· (고가차 보험제도 개선) 자차손해 미수선수리비 폐지 등</li> <li>· (복합점포 수수료 자율화) 고객의 거래규모에 연동한 수수료 지급 허용</li> <li>· (핀테크 데모데이 개최) 클라우드 펀딩 성공사례 발표 등</li> <li>· (내집연금 3중세트 출시)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</li> </ul>
4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기술금융) 투자용 기술평가 개시</li> <li>· (기업투자정보마당 개선) 기업정보 질적 수준 개선, 영문 제공</li> <li>· (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) ATS규제 완화 등 회수시장 다변화</li> <li>· (클라우드펀딩 활성화) '클라우드펀딩 청약촉진펀드' 조성(기은)</li> <li>· (보험다모아 기능개편) 온라인채널용 상품간 보험료 비교</li> <li>· (빅데이터 활성화)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지원방안 마련·발표</li> <li>· (해외진출 지원) "해외진출 지원 정례회의" 행사</li> <li>· (현장점검) 지역금융 및 중점과제 테마 점검</li> <li>· (윤리교육 실태점검) 윤리교육 실태점검</li> <li>· (보험상품 자율화) 상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</li> </ul>



## 참고 1

## 주요과제 연간 추진일정(안)

구분	신규과제	기존과제 점검
2월	· 성과주의 도입 · ISA 관련 투자일임제도 개선 ·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· 옴부즈만 출범	< 자본시장 > · 코넥스시장 활성화('15.4) · 파생상품시장 활성화('15.4) · 장외시장 활성화('15.4)
3월	· ISA 시행 · 자문업 활성화 방안 마련 · 중기특화 IB 선정 · 내집연금 3중세트 출시	< 금융감독개선 > · 검사제재 개혁('15.4) · 20대 금융관행 개선('15.5)
4월	· 보험다모아 개선 · 기업투자정보마당 개선 · 빅데이터 지원방안 마련	< 소비자보호 > · 민원·분쟁처리개혁('15.10) ·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('15.7)
5월	·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도입 · 미래금융 포럼 결성 · 한·불 공동 핀테크 세미나	< 기술금융 > · 기술금융 확대('15.5)
6월	·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 해소 ·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마련 · M&A 중개망 개설 · 전세보증금 투자폴 조성방안마련 · 핀테크 데모데이(UK)	< 해외진출 > · 해외사업 활성화('15.7)
7월~9월	· 핀테크 한마당 구축 · 핀테크 데모데이(US, 동남아) ·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구축 ·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·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· 지역밀착형 금융전략 마련 · '16년 금융세제개편안 마련 · 보증보험연계 중금리 상품 출시	< 핀테크 및 기타과제 > · 핀테크 활성화('15.5)  < 금융개혁 일괄 입법(7월) >  < 상반기 서베이(7월) >
10~12월	·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출시 · 인터넷전문은행 영업개시(잠정) · 현장점검 성과보고회	<신규과제 점검 >  < 하반기 서베이 및 FGI(12월) >

## 참고 2

## 금융개혁 법안 입법현황과 계획

### 1. 국회 정무위 통과법안

구분	법안	주요 내용
기업 구조 조정 촉진	기업 구조조정 촉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시법으로 재입법(~'18.6.30)</li> <li>기촉법 적용대상·참여범위 확대*, 구조조정시 기업 및 소수채권자 의견 반영 강화 등 제도 개선</li> <li>* (적용대상)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(대기업) → '모든' 기업(중소기업 포함)</li> <li>* (참여범위) 채권금융기관 → '모든' 금융채권자</li> </ul>
서민 금융 지원	서민 금융생활 지원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현행 미소금융, 햇살론,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괄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'서민금융진흥원' 설립</li> <li>신복위를 법정기구화하고, 금융회사 등의 개인워크아웃 절차 참여를 의무화</li> </ul>
	대부업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.9% → 연 27.9%로 인하</li> <li>규제공백 기간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연 34.9% 최고 금리를 소급 적용</li> </ul>
	한국 주택금융 공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을 "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" → "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"도 포함하도록 확대</li> <li>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</li> </ul>
핀테크 육성	전자금융 거래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록자본금* 인하(3억원 이상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)</li> <li>* 현행 :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(PG, 10억), 결제대금예치업자(10억), 전자고지결제업자(5억)</li> </ul>
	전자 증권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여 증권거래 인프라 선진화 도모</li> </ul>
자본 시장 개혁	자본 시장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공매도의 투명성 제고</li> <li>사업보고서상 보수공개를 연 2회로 조정하고, 개인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</li> </ul>
	여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기술금융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(200억원 → 100억원)</li> <li>비카드 여전업 자본금 요건 완화</li> <li>* 시설대여업·할부금융업·신기술금융업 모두 영위시 : 400억원 → 200억원</li> </ul>
	공인 회계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제한 확대</li> <li>*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인사·조직 지원, 민·형사 소송 자문 등 금지</li> </ul>
금융 소비자 보호	보험사기 방지 특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험사기 처벌 강화(10년 ↓ 징역, 2천만원 ↓ 벌금 → 10년 ↓, 5천만원 ↓)</li> <li>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의 지체·거절 또는 삭감 금지(위반시 과태료 1,000만원)</li> </ul>

### 2. 향후계획

- ☐ 자본시장법(거래소 지주회사 전환)과 은행법(인터넷전문은행 소액 규제 완화) 개정에도 입법추진 노력을 지속
- ☐ 추가 금융개혁법안은 7월 국회에 일괄 제출하도록 추진

## 1. 2015년 금융개혁 평가

□ 금융산업의 새로운 틀과 기반 마련을 위해 ‘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’<sup>\*</sup>을 마련하고 금융개혁회의 등 **3+1 추진체계**<sup>\*\*</sup> 운영

\* 3대전략, 6대 핵심과제, 18개 세부과제 및 70개 실천과제 선정('15.3월)

\*\* 금융개혁회의, 금융개혁 추진단, 금융개혁 현장점검반, 금융개혁 자문단

○ 금융개혁회의 17차례, 자문단 회의 74회, 추진단 회의 4회를 개최하여 70개 실천과제 대부분을 확정·발표

○ 현장점검반은 435차례 금융회사 등을 방문하여 3,575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(수용률 46%)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

□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권에 경쟁과 혁신의 변화가 시작

① 검사·제재개혁, 그림자규제 근절, 금융규제개혁 등 금융당국의 역할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전환 ➡ 금융권 자율과 책임 확대

\* 현장의 확인서·문답서 폐지,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('01~'14)10건→('15)100건)

\* 현장점검반 435개 금융회사 방문, 3,575건 건의접수, 46% 수용

\* 법령규제 211건 개선, 그림자규제 감축(700개→50개), 금융규제운영규정 시행

② 기술금융을 금융권에 확고히 정착 ➡ 보수적 여신관행 개선

\* '15년중 기술신용대출 28조원 공급, 중소기업 CEO의 96%가 기술금융 이용희망

③ 핀테크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적 금융상품과 서비스 출시  
➡ 국민들의 금융편익 제고 및 개혁성과 체감

\*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,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, 간편결제·간편송금(8개사), 계좌이동서비스 개시(24만건 변경), 보험다모아 오픈(28만명 방문) 등

□ 개혁방안이 금융현장에 보다 깊이 뿌리내려 국민들과 기업들의 신뢰와 체감도를 높여 나갈 필요

○ '16년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금융개혁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‘금융안정’ 및 ‘금융사고 예방’이 전제될 필요

## 2. 현장의 평가

\* 핵심개혁과제(금융감독개선, 기술금융, 핀테크) FGI('15.11), 금융개혁 서베이('15.12), 금융개혁회의('15.12), 정책수요자 간담회('16.1.7, 1.12), 금융발전심의회('16.1.27) 등

구분	현장의 목소리
전반적인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검사제재 개혁은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</li> <li>▪ 사후규제로의 전환은 큰 성과</li> <li>▪ 법령이 개정되어 제도화 되어야 개혁성과 체감</li> <li>▪ 금융당국 실무자의 태도가 개혁의 만족도 여부 좌우</li> </ul>
규제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금융당국 내부부서간, 정부부처간 협업 필요</li> <li>▪ 규제완화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장점검 필요</li> <li>▪ 금융사고로 규제완화가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할 필요</li> <li>▪ 특히,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</li> </ul>
국민과 기업 편익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클라우드펀딩으로 제조업,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</li> <li>▪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</li> <li>▪ 소비자에게 어려운 상품설명서, 가입절차 개선필요</li> <li>▪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</li> </ul>
금융산업 경쟁력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미래금융의 변화·전망에 대응하여 전략 모색 및 규제체계 전면 개편</li> <li>▪ 금융업권간 경쟁을 넘어서 해외진출 등 영역확대 필요</li> <li>▪ 금융산업의 핵심은 인력이므로 인적자본 육성 필요(교육)</li> <li>▪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정보이용자도 책임 질 필요</li> </ul>
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변화 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이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먼저 변화를 시작해야</li> <li>▪ 금융회사의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성과주의 도입해야</li> <li>▪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필요</li> <li>▪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필요</li> <li>▪ 금융당국은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말고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지고 일하게 할 필요</li> <li>▪ 검사제재 개혁이 현장에 정착되기까지 더욱 노력</li> </ul>



### 3. 2015년 주요정책 對국민 서베이 결과

◆ '16년도 정책방향 설정 등을 위해 일반국민(700명) 및 전문가집단(154명)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(갤럽, '15.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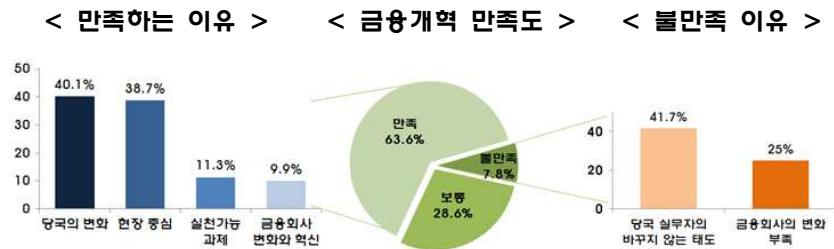
※ '15년 정책방향 설정 등을 위해 일반국민 및 전문가 집단 서베이('14.12)  
※ 금융개혁 100일 성과점검을 위해 전문가 집단 서베이 실시('15.6)

□ (만족도) 전문가는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결과(83.6%) 보다 만족도(92.2%)가 상승

○ 100일 서베이와 달리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(40.1%)를 만족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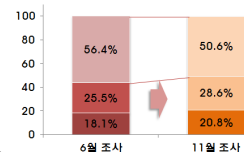
\* 100일 서베이 만족도 : 현장점검반 중심(46.7%), 금융당국의 변화(28.3%)

○ 불만족의 주요 요인도 '금융당국 실무자의 바뀌지 않는 태도'(41.7%)로 평가되어 실무자의 태도 변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



○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기능 확립 여부는 지난 6월 조사보다 낮게 평가됨 ('그렇다' 이상 답변 56.4% → 50.6%)

\* '그렇다' 이상(%) : (금융회사) 66.7, (금융협회) 61.8  
<-> (학계) 16.1, (일반회사) 16.7



□ (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변화) 전반적으로 금융회사의 변화 노력을 감독당국의 변화 노력보다 낮게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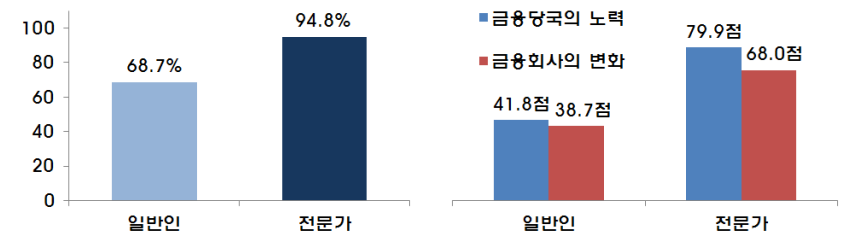
○ (금융당국의 노력) 전문가는 일반인보다 금융당국의 노력에 대해 2배 정도 높게 평가

- 전문가는 지난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(80%)와 유사하게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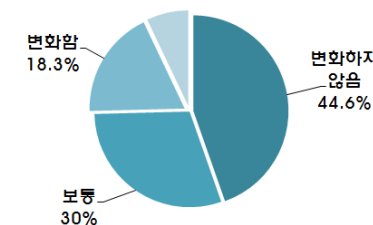
○ (금융회사의 변화) 일반인·전문가 모두 금융당국의 노력보다 금융회사의 변화를 낮게 평가

- 다만, 전문가는 지난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보다 금융회사 변화 노력을 높게 평가 ('그렇다' 이상 56.4%→68.2%)

<금융개혁과제 4개 이상 인지> <금융당국 노력과 금융회사 변화>



<금융회사 변화 - 일반인>



<금융회사 변화 - 전문가>

